

職業能力開發研究
 第9卷(2), 2006. 12, pp. 1~28
 © 韓國職業能力開發院

저소득층의 직업훈련효과에 관한 연구

오 영 훈*

본 연구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직업훈련의 효과를 자격증취득가능성, 취업가능성, 소득수준으로 구분하고 이 세 가지 효과에 미치는 요인을 비저소득층인 일반계층과 비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직업훈련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자격증취득 및 취업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훈련수료여부와 사업주훈련으로 나타났다. 취업가능성은 최저생계비이하의 빈곤층에 비하여 일반계층이 월등히 높았다. 소득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고급훈련, 직무향상훈련, 정보통신관련 자격증 취득, 그리고 성, 연령, 교육수준, 일반계층이었으나 빈곤층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의 소득수준은 음의 방향에서 유의미하였다.

연구결과 직업훈련은 자격증취득과 취업 가능성, 소득 수준을 높이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에 비하여 일반계층에서 직업훈련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층의 훈련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취업가능성이 높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발굴하고, 초급과정 중심에서 중급 이상의 훈련과정을 개설·운영하여 훈련의 질을 높여야 한다.

- 주제어: 저소득층, 직업훈련, 직업훈련효과, 직업훈련요인

투고일: 2006년 10월 31일, 심사일: 11월 17일, 심사완료일: 12월 1일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yhoh@krivet.re.kr)

I. 서론

빈곤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무엇보다도 실업은 빈곤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원인의 하나가 된다. 우리나라의 실업은 저소득 가구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들 저소득계층은 대부분 전문적인 기술이나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고용과 자영의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적인 지원 없이는 자립할 수 없는 이들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실업과 빈곤에 따른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빈곤 문제의 해결은 빈곤의 원인이 다양하고 국가와 시기에 따라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책도 다양할 수밖에 없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은 적극적인 빈곤 대책의 하나로서 특히 직업훈련은 빈곤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최일섭·曺성재, 1996: 81).

저소득 빈곤계층이 경험하고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숙련, 저임금,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개인의 경력 향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득기회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직업훈련의 중심과제가 저소득 빈곤층에게 온전한 취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한 직업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집중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에 대응하여 직업훈련은 중요한 실업대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훈련의 효과에 대한 분석은 매우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 주로 다루어진 직업훈련의 취업이나 소득의 효과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훈련의 효과분석을 목적으로 한 연구의 대부분이 일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에도 저소득층을 세분화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의 차이를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조건부수급자와 다를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차상위계층¹⁾(황덕순, 2004: 63)을 대상으로한 분석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직업훈련 효과로서 직업훈련이 자격증취득과 취업 그리고 소득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과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 그리고 일반계층으로 구분하여 소득계층별로 직업훈련의 효과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훈련대상에 따라 훈련을 차별화함으로써 훈련효과를 높이는 한편 직업훈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직업훈련의 효과와 관련한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직업훈련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요인들은 훈련기간, 훈련직종, 훈련프로그램의 종류, 성, 연령, 교육수준, 가족배경, 지역적 특성, 노동시장의 특성 등이다(Veum, 1995; Blalock, 1990; Meyer, 1990; Castle, 1989; Barnow, 1987; Bassi, 1983; Westat, 1981; Perry et al., 1976).

Meyer(1990)는 CWBH(Continuous Wage and Benefit History)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기혼, 높은 교육수준, 높은 임금, 낮은 실업급여 수준 등이 재취업 확률을 높이고 부양가족수 등의 변수가 재취업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Vesalainen & Vuori(1999)은 실업기간 중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Perry et al.(1976)는 직업훈련이 훈련생들의 경제적 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고 있다. Westat(1981)는 직업훈련 평가결과 성, 인종, 연령, 교육수준, 경력, 가족 특성, 훈련전의 소득수준, 직업훈련 유형 등 모든 집단에서 직업훈련의 소득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효과에 관한 연구는 정원오(1999),

1) 차상위계층이라는 개념은 일반 학술적인 용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기초보장분야에서 활용되는 법적·행정적 용어로서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의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도 최저생계비(4인)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1,363,598원 미만인 자를 차상위계층으로 설정하였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현주 외(2005)를 참조하면 된다.

강순희·노홍성(2000), 남재량(2004), 오영훈(2005), 김주섭 외(2006) 등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정원오(1999)는 고용촉진훈련의 성과연구에서 훈련시간, 훈련직종, 훈련제공 주체와 같은 훈련내적요인이 자격증 취득 및 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근로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추론하고 있다.

강순희·노홍성(2000)은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직업훈련의 취업 및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공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민간 부문보다 더 높은 취업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직업훈련의 임금효과는 임금근로자에게 한정하였을 경우 직업훈련을 경험한 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남재량(2004) 역시 고용촉진훈련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데 훈련수료 여부가 자격증 취득 가능성을 높여주며, 자격증취득은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고 있다.

또한 오영훈(2005)은 자활직업훈련의 훈련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훈련기간이 길 수록 자격증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고, 건설 및 전기전자 분야 훈련직종의 경우 서비스 분야보다 취업가능성이 높았으나 훈련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수료생의 경우 취업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자활훈련 참여자의 소득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현재 하고 있는 직무와 이수한 훈련직종의 관련성, 성, 학력, 사업장 규모, 1일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주섭 외(2006)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2년도 자활지원대상자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직업훈련 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훈련분야 및 훈련과정, 훈련받기 전 직장과의 관련성 등 직업훈련 관련 변수들은 취업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구직활동, 훈련 전 취업여부, 연령, 성별, 결혼여부, 생계책임자 여부, 취업가구원 수, 일부 지역 등은 취업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건설, 기계장비, 제조분야의 훈련을 받을수록, 훈련과정과 일자리 분야가 일치할수록, 전일제, 고학력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임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저소득층을 세분화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의 차이를 규명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을 최저생계비 이하와 차상위계층, 일반계층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직업훈련 효과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한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5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실시한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이다.²⁾ 조사 대상은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로서 조사 표본은 일차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인구 분포를 감안하여, 표본조사가구 수를 할당하여 다단계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한 후, 조사대상 가구의 18세 이상 성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전국 5,000가구의 18세 이상 성인 9,570명이다.

소득계층의 구분은 2005년 6월 조사 당시의 가구수입을 정부가 제시한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보건복지부, 2005).

<표 1> 소득계층별 조사 대상자 분포

(단위: 명)

계	최저생계비 이하	차상위계층	일반계층
9,570	1,402	256	7,912

주: 최저생계비 이하는 1,136,322원 이하, 일반계층은 1,364,000원 이상임.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격증취득 여부, 취업 여부 그리고 월 평균 근로소득이다. 또한 직업훈련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을 훈련요인과 사회인구학적요인 그리고 노동시장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각 요인별 변수는 <표 2>와 같다.

2) 본 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홍근·윤여인(2005)을 참조하면 된다.

이들 종속변수 중 자격증취득 여부와 취업 여부는 이분변수이기 때문에 로짓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연속변수인 소득은 OLS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모델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증 취득 및 취업 확률에 대한 분석 모델

$$\text{Log} \frac{\Pi_{ij}}{1 - \Pi_{ij}} = \alpha + \beta_i IT_i + \gamma_i ET_i \quad (j=0, 1)$$

단, Π_i 는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할 확률, IT_i 는 훈련요인에 관한 변수, ET_i 는 사회인구학적요인에 관한 변수임.

(2) 소득에 대한 분석 모델

$$Y_i = \alpha + \beta_i IT_i + \gamma_i ET_i + \delta_i L_i$$

단, Y_i 는 훈련참여자의 근로소득, IT_i 는 훈련요인에 관한 변수, ET_i 는 사회인구학적요인에 관한 변수, L_i 는 노동시장요인에 관한 변수임.

<표 2> 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훈련요인	훈련참여여부	훈련참여 여부 더미(1:참여)
	훈련기간	훈련일수(단위: 일)
	훈련기관	훈련기관 더미[직업전문학교(1), 사업주훈련(1), 학원(1), 주민자치센터(1), 산업교육전문기관(1)]
	훈련과정	훈련과정 더미[양성/전직훈련(1), 직무향상훈련(1), 외국어습득훈련(1), 자격증취득훈련(1), 정보화습득훈련(1)]
	훈련수준	훈련수준 더미[고급과정(1), 중급과정(1), 초급과정(1)]
	훈련비부담주체	훈련비부담주체 더미 [정부지원(1), 회사지원(1), 본인부담(1)]
	자격종목	자격종목 더미[기계장비(1), 건설(1), 운송장비 제조(1)전기(1), 정보통신(1), 사무관리(1), 금융보험(1), 의료]
	수료여부	수료여부 더미(1=수료, 0=미수료)
사회인구학적요인	성	성별 더미(1=남자, 0=여자)
	연령	연령계층 더미[20-29세(1), 30-39세(1), 40-49세(1), 50-59세(1), 60세 이상(1)]
	혼인상태	혼인상태 더미[기혼(1), 미혼(1), 사별/이혼/별거(1)]
	가구내위치	가구내위치 더미[가구주(1), 배우자(1), 자녀(1)]
	교육수준	학력 더미[중졸이하(1), 고졸(1), 전문대졸(1), 대졸이상(1)]
	양육자녀여부	미취학아동/초등학교자녀 더미(양육자녀:1)
	간병가족여부	간병가족 더미(간병가족:1)
	거주지	거주지 더미[대도시(1), 중소도시(1), 읍/면/군지역(1)]
	주택소유여부	주택소유 더미(소유:1)
	수급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더미(1:수급자)
	정부급여수급여부	정부급여수급 여부 더미(수급:1)
소득계층	소득계층별 더미(최저생계비이하: 0)	
노동시장요인	근로시간	주당 노동시간
	근무직종	근로직종별 더미[서비스판매직(1), 관리직(1), 전문기술직(1), 사무직(1), 농업어업직(1), 기능직(1), 단순노무직(1)]
	종사상지위	종사상지위별 더미[정규직(1), 비정규직(1), 무급가족종사자(1)]
	사업장규모	사업장 규모별 더미[10인 미만(1), 10-29인(1), 30-99인(1), 100-299인(1), 300-499인(1), 500인 이상(1)]

IV. 분석 결과

1. 기술적 분석

가. 직업훈련 참여자의 특성

지난 1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훈련참여자의 특성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남성(60.7%)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최저생계비이하(이하 '빈곤층'이라 한다)와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라 한다)의 경우 40대 이상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계층(이하 '일반인'이라 한다)은 30대와 40대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혼인상태별로는 전체적으로 80%이상이 기혼자이나, 빈곤층의 경우 사별, 이혼, 별거 중인 자(9.8%)가, 차상위는 미혼자(31.0%)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가구내 지위별로는 전체적으로 가구주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반인의 경우 배우자(27.7%)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별로는 빈곤층(51.0%)과 차상위(62.1%)의 경우 중졸이하가 절반을 넘고 있는데 비해 일반인은 42.3%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주거지역은 빈곤층과 일반인은 중소도시, 차상위는 읍·면·군지역(44.8%) 거주자가 가장 많았고, 일반인의 경우 대도시(41.3%)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은 전체적으로 76%가 소유하고 있으며, 간병해야할 가족이 있는 경우는 약 5%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교 자녀(이하 '양육자녀'라 한다)를 둔 자는 일반인(47.0%)이 빈곤층이나 차상위에 비하여 월등히 많았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실업급여, 국민연금 등(이하 '정부급여'라 한다)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은 차상위(20.7%), 빈곤층(15.4%)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빈곤층이 4.2%로 가장 많았다. 평균 가족수는 빈곤층(2.29명)에 비하여 일반인(3.71명)이 많았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차상위를 포함한 저소득층과 일반인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중졸이하의 저학력은 훈련을 수강하기 위한 기초학습능력과 직결된다. 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훈련은 비단 학력뿐 아니라 연령 등 저소득층의 특성을 고려한 훈련과정의 운영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 직업훈련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최저생계비이하	차상위계층	일반계층	전체
성별	여자	57 (39.9)	10 (34.5)	327 (39.4)	394 (39.3)
	남자	86 (60.1)	19 (65.5)	503 (60.6)	608 (60.7)
연령***	20세 미만	2 (1.4)	2 (6.9)	8 (1.0)	12 (1.2)
	20~29세	14 (9.8)	5 (17.2)	96 (11.6)	115 (11.5)
	30~39세	17 (11.9)	1 (3.4)	290 (34.9)	308 (30.7)
	40~49세	31 (21.7)	5 (17.2)	305 (36.7)	341 (34.0)
	50~59세	44 (30.8)	9 (31.0)	97 (11.7)	150 (15.0)
	60세 이상	35 (24.5)	7 (24.1)	34 (4.1)	76 (7.6)
혼인상태***	기혼	100 (69.9)	20 (69.0)	697 (84.0)	817 (81.5)
	미혼	28 (19.6)	9 (31.0)	125 (15.1)	162 (16.2)
	사별이혼별거	14 (9.8)	0 (0.0)	8 (1.0)	22 (2.2)
가구내지위**	가구주	107 (74.8)	22 (75.9)	480 (57.8)	609 (60.8)
	배우자	26 (18.2)	2 (6.9)	230 (27.7)	258 (25.7)
	자녀	9 (6.3)	4 (13.8)	104 (12.5)	117 (11.7)
	기타	1 (0.7)	1 (3.4)	16 (1.9)	18 (1.8)
학력***	중졸이하	73 (51.0)	18 (62.1)	83 (10.0)	174 (17.4)
	고졸	37 (25.9)	5 (17.2)	243 (29.3)	285 (28.4)
	전문대졸	8 (5.6)	2 (6.9)	112 (13.5)	122 (12.2)
	대졸이상	11 (7.7)	2 (6.9)	351 (42.3)	364 (36.3)
	학교재학	14 (9.8)	2 (6.9)	38 (4.6)	54 (5.4)
주거지역***	대도시	31 (21.7)	7 (24.1)	343 (41.3)	381 (38.0)
	중소 도시	60 (42.0)	9 (31.0)	400 (48.2)	469 (46.8)
	군지역	52 (36.4)	13 (44.8)	87 (10.5)	152 (15.2)
주택소유	아니오	37 (25.9)	6 (20.7)	193 (23.3)	236 (23.6)
	예	106 (74.1)	23 (79.3)	637 (76.7)	766 (76.4)
간병가족	없다	135 (94.4)	27 (93.1)	786 (94.7)	948 (94.6)
	있다	8 (5.6)	2 (6.9)	44 (5.3)	54 (5.4)
양육자녀***	없다	124 (86.7)	28 (96.6)	440 (53.0)	592 (59.1)
	있다	19 (13.3)	1 (3.4)	390 (47.0)	410 (40.9)
정부급여***	없다	121 (84.6)	23 (79.3)	782 (94.2)	926 (92.4)
	있다	22 (15.4)	6 (20.7)	48 (5.8)	76 (7.6)
수급자여부**	비수급자	137 (95.8)	29 (100.0)	825 (99.4)	991 (98.9)
	수급자	6 (4.2)	0 (0.0)	5 (0.6)	11 (1.1)
가족수		2.29	2.62	3.71	3.48
전체		143 (100.0)	29 (100.0)	830 (100.0)	1,002 (100.0)

주: ***는 0.1%,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각각 의미.

나. 직업훈련 참여 실태

〈표 4〉는 훈련 참여자들의 훈련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훈련과정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직무향상훈련(61.0%)을 가장 많이 수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득계층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이들이 수강한 훈련기관을 보면 빈곤층과 차상위의 경우 주민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1/3 이상으로 가장 많은데 비해 일반인은 사업주 훈련이 39.8%로 가장 많다. 훈련수준은 빈곤층(73.3%)과 차상위(81.5%)의 경우 초급수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일반인은 중급이상이 절반을 차지하였다. 이들 중 중도탈락한 사람은 약 7%로 소득계층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훈련과정 중 자격증 취득과 관련이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316명으로 이들 중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42.4%를 나타내고 있는데 소득계층별로는 빈곤층이 50%로 가장 많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또한 훈련비 부담주체는 빈곤층(70.4%)과 차상위(62.1%)의 경우 정부지원, 일반인은 회사지원(39.0%)이 가장 많다. 총 훈련일수는 일반인의 훈련일수(41.3일)가 차상위의 훈련일수(15일)에 비해 2.8배 길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훈련에 있어서도 저소득층과 일반인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훈련의 생산성과 관련하여 차상위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훈련내용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격증 취득, 취업, 그리고 소득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훈련수준의 경우 초급수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학습능력 등 저소득층의 특성을 반영한 훈련과정의 개발과 함께 훈련방법 등의 훈련운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4> 직업훈련 참여자의 훈련 특성

(단위: 명, %, 일)

구분	최저생계비이하	차상위계층	일반계층	전체	
훈련과정	양성훈련	2 (14.6)	5 (17.2)	155 (18.7)	181 (18.1)
	직무향상훈련	100 (69.9)	19 (65.5)	492 (59.3)	611 (61.0)
	전직훈련	5 (3.5)	0 (0.0)	30 (3.6)	35 (3.5)
	외국어훈련	3 (2.1)	2 (6.9)	44 (5.3)	49 (4.9)
	자격증훈련	9 (6.3)	3 (10.3)	67 (8.1)	79 (7.9)
	정보화훈련	5 (3.5)	0 (0.0)	42 (5.1)	48 (4.7)
계	143 (100.0)	29 (100.0)	830 (100.0)	1002 (100.0)	
훈련기관***	직업전문학교	14 (9.8)	2 (6.9)	73 (8.8)	89 (8.9)
	사업주훈련	8 (5.6)	4 (13.8)	326 (39.4)	338 (33.8)
	학원	19 (13.3)	4 (13.8)	122 (14.7)	145 (14.5)
	주민자치센터	52 (36.4)	11 (37.9)	57 (6.9)	120 (12.0)
	산업교육기관	14 (9.8)	4 (13.8)	92 (11.1)	110 (11.0)
	기타	36 (25.2)	4 (13.8)	158 (19.1)	198 (19.8)
계	143 (100.0)	29 (100.0)	828 (100.0)	1000 (100.0)	
훈련수준***	초급	96 (73.3)	22 (81.5)	344 (43.9)	462 (49.0)
	중급	29 (22.1)	4 (14.8)	311 (39.7)	344 (36.5)
	고급	6 (4.6)	1 (3.7)	129 (16.5)	136 (14.4)
계	131 (100.0)	27 (100.0)	784 (100.0)	942 (100.0)	
수료여부	중도탈락	6 (4.3)	2 (6.9)	61 (7.4)	69 (6.9)
	수료	120 (85.7)	26 (89.7)	645 (78.3)	791 (79.7)
	훈련 중	14 (10.0)	1 (3.4)	118 (14.3)	133 (13.4)
계	140 (100.0)	29 (100.0)	824 (100.0)	993 (100.0)	
자격증 취득여부	미취득	13 (50.0)	3 (42.9)	118 (41.7)	134 (42.4)
	취득	13 (50.0)	4 (57.1)	165 (58.3)	182 (57.6)
계	26 (100.0)	7 (100.0)	283 (100.0)	316 (100.0)	
훈련비부담 주체****	정부지원	100 (70.4)	18 (62.1)	237 (28.7)	355 (35.6)
	회사지원	11 (7.7)	4 (13.8)	322 (39.0)	337 (33.8)
	본인부담	27 (19.0)	5 (17.2)	197 (23.8)	229 (23.0)
	회사정부본인	4 (2.8)	2 (6.9)	70 (8.5)	76 (7.6)
계	142 (100.0)	29 (100.0)	826 (100.0)	97 (100.0)	
총훈련일수**	27.41 (63.0)	14.97 (35.1)	41.34 (61.8)	38.57 (61.7)	

주: 1) ***는 0.1%,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각각 의미.

2) 총훈련일수의 경우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다. 경제활동 실태

조사대상자의 월 평균임금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소득계층별로는 빈곤층의 경우 월 평균임금이 53만여원, 차상위는 89만여원으로 일반인(181만원)의 1/3내지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성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남자의 임금이 월등히 높다. 연령별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은 30대의 임금이 가장 높고, 차상위는 20대가, 그리고 일반인은 40대가 가장 높다. 학력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임금수준이 높고, 주거지역별로는 빈곤층과 차상위의 경우 대도시 거주자의 임금이 가장 높은데 비해 일반인은 중소도시 거주자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으며, 읍·면·군지역의 경우 빈곤층에 비하여 일반인의 임금이 무려 5.6배나 높다. 또한 국민연금 등 정부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월 평균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인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에 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빈곤층과 차상위는 수급자의 임금수준이 더 높은데 비해 일반인은 비수급자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6>은 소득계층별 직종별, 종사상지위별, 사업장규모별 월 평균임금을 제시한 것이다. 근무직종별로 보면 빈곤층의 경우 전문·기술직, 차상위는 기능직 그리고 일반인은 관리직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데 비해, 농림어업직의 경우 모든 계층에서 여타 직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임금수준이 낮는데 이는 이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무급가족종사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사상 지위별로 역시 정규직 종사자의 임금이 높는데 소득계층별로는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에서의 소득계층별 임금의 차이가 더 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차상위와 일반인의 경우 사업장 규모가 클 수록 임금수준이 높으나, 빈곤층은 30인~99인 사업장 근무자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다.

또한 훈련특성별로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년 기간 중에 훈련에 참여한 사람의 임금수준이 비참여자에 비하여 높고, 훈련중도탈락자에 비하여 수료생이, 그리고 자격증 취득자의 임금수준이 높다. 훈련과정별로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향상훈련 참여자의 임금이 가장 높으며, 훈련수준별로는 역시 고급과정일수록 임금수준이 높다.

<표 5> 소득계층별 조사대상 특성별 월 평균임금

(단위: 만원, 명)

구분		최저생계비이하	차상위계층	일반계층
성별	여자	42.58 (336)	67.40 (78)	91.60 (1,443)
	남자	82.05 (125)	113.2 (68)	240.5 (2,146)
		F=61.123, p=.000	F=37.992, p=.000	F=1916.2, p=.000
연령	20세 미만	56.67 (3)	75.00 (2)	55.87 (23)
	20~29세	79.68 (62)	115.00 (34)	127.38 (477)
	30~39세	75.43 (80)	92.80 (35)	186.77 (1,219)
	40~49세	52.12 (124)	88.18 (49)	207.07 (1,300)
	50~59세	35.75 (130)	47.90 (20)	161.27 (516)
	60세 이상	37.24 (62)	61.67 (6)	115.09 (54)
		F=11.793, p=.000	F=5.736, p=.000	F=42.702, p=.000
학력	중졸이하	26.34 (210)	55.73 (45)	71.26 (358)
	고졸	74.29 (174)	102.08 (74)	150.63 (1,479)
	전문대졸	86.04 (24)	110.36 (14)	186.10 (500)
	대졸이상	86.45 (31)	115.56 (9)	259.80 (1,128)
	재학중	61.82 (22)	77.50 (4)	105.48 (115)
	무응답			201.11 (9)
		F=36.148, p=.000	F=9.206, p=.000	F=229.97, p=.000
주거지역	대도시	76.80 (177)	102.65 (65)	181.23 (1,980)
	중소도시	59.32 (147)	94.51 (61)	195.75 (1,406)
	군지역	16.42 (137)	26.00 (20)	92.21 (253)
		F=72.159, p=.000	F=24.504, p=.000	F=78.324, p=.000
정부급여	있다	53.49 (396)	89.18 (126)	181.62 (3,417)
	없다	51.98 (65)	86.00 (20)	161.28 (172)
		F=.048, p=.826	F=.069, p=.793	F=4.426, p=.035
수급자 여부	비수급자	53.12 (432)	88.26 (140)	180.79 (3,566)
	수급자	55.76 (29)	100.00 (6)	157.96 (23)
		F=.072, p=.788	F=.313, p=.577	F=.778, p=.378
전체		53.28 (461)	88.75 (146)	180.65 (3,589)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는 소득계층 특성별로 임금수준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직업훈련이 소득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고급훈련 과정으로서 훈련을 제대로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임금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훈련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뿐 아니라 훈련과정을 제대로 이수하는 것이 훈련의 성과를 더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의 효과가 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정규직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그리고 영세자
영업자에 대한 훈련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6> 소득계층별, 직종별, 종사상지위별, 사업장규모별 월 평균임금

(단위: 만원, 명)

구분		최저생계비이하	차상위계층	일반계층
직종	서비스판매직	57.44 (89)	99.79 (24)	103.99 (624)
	관리직	88.57 (7)	98.25 (4)	280.54 (376)
	전문직·기술직	94.55 (33)	118.46 (13)	238.92 (743)
	사무직	88.65 (43)	86.38 (16)	205.68 (845)
	농림어업직	2.54 (126)	1.58 (19)	7.62 (130)
	기능직	86.45 (22)	119.53 (32)	185.61 (423)
	단순노무직	69.15 (139)	89.26 (38)	104.82 (439)
	전체	53.37 (459)	88.75 (146)	180.78 (3,580)
		F=54.165, p=.000	F=24.940, p=.000	F=265.25, p=.000
종사상 지위	정규직	85.98 (104)	117.19 (68)	231.72 (2,336)
	비정규직	73.10 (210)	95.92 (52)	119.70 (876)
	무급가족종사자	1.84 (147)	0.00 (26)	5.60 (375)
	전체	53.28 (461)	88.75 (146)	180.72 (3,587)
		F=213.54, p=.000	F=181.89, p=.000	F=1096.0, p=.000
사업장 규모	10인 미만	41.17 (327)	70.97 (77)	100.72 (1,222)
	10~29인	77.71 (51)	109.35 (23)	182.54 (579)
	30~99인	111.34 (29)	103.18 (17)	204.35 (601)
	100~299인	78.18 (11)	107.00 (10)	233.16 (334)
	300~499인	100.00 (2)	102.50 (4)	266.52 (137)
	500인 이상	84.17 (12)	121.67 (6)	285.36 (565)
	전체	52.60 (432)	87.18 (137)	182.43 (3,438)
		F=17.444, p=.000	F=4.100, p=.002	F=302.49, p=.000

<표 7> 훈련특성별 월 평균임금

(단위: 명, 만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훈련여부	훈련미참여	3,656	153.89	117.556	F=177.556 p=.000
	훈련참여	540	228.23	142.110	
	전체	4,196	163.46	123.512	
수료여부	중도탈락	33	185.15	139.695	F=1.828 p=.162
	수료	432	232.78	142.983	
	현재 훈련 중	72	221.18	137.048	
	전체	537	228.30	142.232	
훈련과정	양성훈련	72	183.92	103.019	F=5.613 p=.000
	직무향상훈련	355	249.19	146.906	
	전직훈련	19	156.32	104.294	
	외국어훈련	33	224.79	140.350	
	자격증취득훈련	40	171.85	136.901	
	정보화훈련	24	200.83	132.145	
전체	543	227.97	141.767		
훈련수준	초급	197	170.94	128.150	F=31.682 p=.000
	중급	232	259.55	141.414	
	고급	85	286.34	134.226	
	전체	514	230.02	143.143	
자격증 취득여부	미취득	74	194.11	111.978	F=3.784 p=.053
	취득	103	233.19	144.408	
	전체	177	216.85	132.892	

2. 직업훈련 효과 결정 요인

가. 자격증 취득 요인

<표 8>은 훈련참여자의 자격증취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짓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모델(1-1)은 훈련요인만이 투입된 경우로 훈련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수료여부만이 자격증취득 확률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비해, 초급수준의 훈련과정, 본인이 부담한 훈련, 양성·전직훈련과정 그리고 직무향상훈련 변수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분석모델(1-2)는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모델로서 훈련요인과 사회인구학적인 요인들이 통제된 상태

에서는 수료여부와 사업주훈련 변수가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에 비하여 초급과정, 본인부담 훈련, 양성·전직훈련과정, 직무향상훈련, 외국어훈련은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주택소유여부와 간병가족 여부, 전문대졸자 변수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훈련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수료생일수록 자격증을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료생의 오즈(odds)는 중도탈락자 오즈의 32배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료생의 경우 중도탈락보다 자격증을 취득할 확률이 월등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훈련의 경우 10%수준에서 자격증취득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성·전직훈련과정, 직무향상훈련, 외국어훈련과정은 자격증취득 확률이 낮았다.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주택소유자와 전문대졸자의 경우 자격증취득 확률이 높았다.

<표 8> 훈련참여자의 자격증취득 가능성에 대한 로짓 분석

변 수	모델(1-1)			모델(1-2)		
	추정계수	Exp(β)	유의수준	추정계수	Exp(β)	유의수준
총훈련일수		-		0.005	(1.005)	
수료	2.502	(12.208)	***	3.466	(32.020)	***
사업주훈련		-		0.963	(2.619)	#
주민자치센터		-		2.520	(12.429)	
초급과정	-1.46	(0.232)	***	-1.33	(0.262)	***
본인부담	-0.74	(0.474)	*	-0.85	(0.427)	*
양성/전직과정	-1.11	(0.329)	*	-1.40	(0.245)	**
직무향상훈련	-1.13	(0.321)	*	-1.80	(0.164)	**
외국어훈련				-4.48	(0.011)	*
주택소유				0.883	(2.418)	*
간병가족				3.006	(20.207)	#
전문대졸				0.893	(2.442)	#
상수	0.184	(1.202)		-1.57	(0.208)	
Chi-Squarae		57.749***			82.467***	
Negelkerke R2		0.308			0.438	
집단분류정확도		75.7			79.9	
-2LL		235.508			93.472	

주: ***는 0.1%, **는 1%, *는 5%, #은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각각 의미.

나. 취업결정 요인

훈련참여자의 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짓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모델(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훈련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수료여부, 사업주훈련, 훈련비용을 정부 또는 회사가 지원하는 훈련, 그리고 직무향상훈련의 변수가 취업 확률에 5% 유의수준에서, 그리고 학원과 고급과정은 10% 유의수준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총 훈련일수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총 훈련일수가 길수록 취업가능성이 낮을 확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델(2-2)는 사회인구학적요인들을 통제한 모델로서 훈련요인과 사회인구학적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수료여부, 사업주훈련, 정부지원 훈련, 그리고 직무향상훈련 변수는 취업 확률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였다. 총 훈련일수는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사회인구학적인 중에서는 연령, 차상위계층, 일반계층, 그리고 읍·면·군지역 변수가 취업에 양의 방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가구주에 비하여 배우자, 자녀의 경우, 그리고 수급자 역시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수료생, 사업주훈련, 정부지원 훈련,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향상훈련이 취업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직무향상훈련의 오즈는 6.7로서 직무향상훈련의 취업가능성이 매우 큰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인구학적인 중에서는 10%의 유의수준에서 연령이 많을 수록, 읍·면·군지역 거주자가 대도시 거주자보다 취업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 빈곤층에 비하여 취업할 확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인의 오즈(odds)는 빈곤층 오즈의 15.6배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구주에 비하여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수급자의 취업가능성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9> 훈련참여자의 취업가능성에 대한 로짓 분석

변 수	모델(2-1)			모델(2-2)		
	추정계수	Exp(β)	유의수준	추정계수	Exp(β)	유의수준
총훈련일수	-0.006	(0.994)	**	-0.002	(0.998)	
수료	0.794	(2.212)	*	1.061	(2.889)	*
사업주훈련	0.786	(2.195)	*	0.973	(2.646)	*
학원	0.607	(1.834)	#	0.705	(2.024)	#
고급과정	0.666	(1.946)	#	-		
정부지원	1.174	(3.234)	***	0.661	(1.937)	#
회사지원	1.118	(3.058)	**	0.615	(1.851)	
직무향상훈련	2.443	(11.509)	***	1.898	(6.672)	***
건설	18.987			16.474		
운송장비제조	20.016			19.384		
연령(만)				0.047	(1.048)	#
중졸이하				-		
고졸				-3.024	(0.049)	*
전문대졸				-3.131	(0.044)	*
대졸이상				-2.680	(0.069)	*
최저생계비이하				-		
차상위계층				2.03	(7.655)	**
일반계층				2.750	(15.639)	***
수급자				-2.654	(0.070)	#
대도시				-		
중소도시				0.138	(1.148)	
읍면지역				1.937	(6.940)	#
가구주				-		
배우자				-3.551	(0.029)	***
자녀				-2.031	(0.131)	**
상수	-0.40	(0.665)		0.252	(1.287)	
Chi-Square		206.402***			280.796***	
Nagelkerke R2		0.421			0.603	
집단분류정확도		89.2			92.7	
-2LL		404.322			260.292	

주: ***는 0.1%, **는 1%, *는 5%, #은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각각 의미.

다. 소득 크기 결정 요인

<표 10>~<표 12>는 직업훈련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훈련요인 통제모형과, 사회인구학적요인 통제모형, 노동시장요인 통제모형으로 구분하여 소득계층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최저생계비이하 빈곤층의 경우 모델(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훈련요인만을 투입하였

을 경우 직업전문학교, 고급과정, 사무관리 변수는 소득에 양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부지원 변수는 음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직업전문학교에서의 훈련과 고급훈련과정, 그리고 사무관리 관련 자격증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소득의 효과가 높은 경향을 보여 주고 있으나, 정부가 훈련비를 부담한 경우 소득효과가 낮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인구학적요인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경우[(모델(3-2)) 훈련요인은 모델(3-1)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인구학적요인 중에서는 성과 혼인상태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중졸이하와 읍·면·군지역은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남성과 미혼, 사별, 이혼, 별거 등 편부모 가정의 경우 소득의 효과가 있으나 중졸 이하와 읍·면·군 지역 거주자의 경우 소득의 효과가 낮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모델(3-2)에 노동시장 요인을 통제한 모델(3-3)의 분석결과를 보면, 고급훈련과정, 성, 사별, 이혼, 별거 그리고 노동시장요인 중에서는 정규직과 30~99인의 사업장이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졸이하, 읍·면·군지역,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최저생계비이하 빈곤층의 경우 직업훈련참여자의 소득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훈련수준과 성별, 혼인상태, 학력 수준, 주거지역 그리고 종사상 지위,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소득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차상위의 경우 모델(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훈련요인만을 투입하였을 경우 양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었으나, 직무향상훈련 변수는 음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직무향상훈련을 받은 사람의 경우 소득효과가 낮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인구학적요인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경우[(모델(4-2)) 훈련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인구학적요인 중에서는 성만이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 하였으며, 주택소유, 기혼자, 간병가족, 중졸이하, 읍·면·군지역의 경우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남성의 경우 소득의 효과가 있으나 주택 소유자, 기혼자, 간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자, 중졸이하의 저학력자 그리고 읍·면·군 지역 거주자의 경우 소득의 효과가 낮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최저생계비이하 훈련참여자의 소득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델(3-1)			모델(3-2)			모델(3-3)		
	추정계수	표준화계수	유의수준	추정계수	표준화계수	유의수준	추정계수	표준화계수	유의수준
직업전문학교	66.013	(0.134)	**	33.101	(0.067)	#	19.932	(0.041)	
고급	286.848	(0.261)	***	233.000	(0.212)	***	181.269	(0.166)	***
정부지원	-39.179	(-0.160)	**	-17.159	(-0.070)	#	-3.487	(-0.014)	
사무관리	37.915	(0.140)	**	23.824	(0.088)	*	12.831	(0.048)	
성별				30.085	(0.261)	***	18.560	(0.160)	***
미혼				12.560	(0.092)	*	5.516	(0.040)	
사별/이혼				33.649	(0.255)	***	14.772	(0.112)	**
중졸이하				-22.398	(-0.218)	***	-8.498	(-0.082)	*
군지역				-26.952	(-0.241)	***	-11.696	(-0.104)	**
정규직							15.692	(0.128)	***
무급가족종사자							-43.292	(-0.393)	***
30-99인							28.269	(0.135)	***
상수	52.330		***	54.074		***	59.698		**
F	11.905***			42.504***			50.991**		
Adj R ²	0.087			0.448			0.570		

주: ***는 0.1%, **는 1%, *는 5%, #은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각각 의미.

<표 11> 차상위계층 훈련참여자의 소득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델(4-1)			모델(4-2)			모델(4-3)		
	추정계수	표준화계수	유의수준	추정계수	표준화계수	유의수준	추정계수	표준화계수	유의수준
직무향상훈련	-80.399	(-0.228)	**	-24.108	(-0.068)		-35.117	(-0.085)	#
성별				42.861	(0.427)	***	21.248	(0.216)	***
주택소유				-13.896	(-0.139)	*	-2.046	(-0.021)	
기혼				-35.659	(-0.345)	***	-12.237	(-0.121)	*
간병가족				-23.414	(-0.129)	*			
중졸이하				-14.430	(-0.133)	*	-7.031	(-0.066)	
군지역				-37.524	(-0.258)	***	-3.656	(-0.025)	
주당 근로시간							.292	(0.102)	*
정규직							15.238	(0.155)	**
무급가족종사자							-74.528	(-0.562)	***
상수	90.399		***	109.585		***	81.781		***
F	7.890***			26.578***			46.201***		
Adj R ²	0.045			0.553			0.744		

주: ***는 0.1%, **는 1%, *는 5%, #은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각각 의미.

또한 모델(4-2)에 노동시장 요인을 통제한 모델(4-3)의 분석결과를 보면, 성, 정규직, 주당 근로시간 변수가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혼자, 무급가족 종사자의 경우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직업훈련 참여자의 경우 소득크기에 영향을 주는 훈련요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성별, 혼인상태, 종사상 지위, 주당 근무량에 따라서 소득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계층의 경우 모델(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훈련요인 중 직무향상훈련, 외국어훈련, 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훈련, 산업교육기관, 회사부담 그리고 기계장비, 건설, 전기, 정보통신 변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초급과정 변수는 음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직무향상훈련, 외국어훈련,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사업주 훈련, 산업교육전문기관, 회사부담훈련 그리고 기계장비, 건설, 전기,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취득자의 소득효과가 높은 경향을 보여 주고 있으나, 초급훈련과정은 소득효과가 낮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인구학적요인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경우 [모델(5-2)] 훈련요인 중 직무향상훈련, 외국어훈련, 사업주훈련, 회사부담 그리고 전기, 정보통신 변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초급과정 변수는 역시 음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회인구학적요인 중에서는 성, 주택소유, 양육자녀, 20세 이상의 모든 연령계층과 고졸이상의 학력 변수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중졸이하와 군지역은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모델(5-2)에 노동시장 요인을 통제한 모델(5-3)의 분석결과를 보면 직무향상훈련, 외국어훈련, 회사부담 그리고 전기, 정보통신 변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초급과정 변수는 역시 음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회인구학적요인은 모델(5-2)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시장요인 중에서는 주당 근로시간, 정규직, 비정규직, 10인 미만을 제외한 사업장 규모 변수가 양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하였으나, 10인 미만 변수는 음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일반계층의 경우 직업훈련참여자의 소득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 직무향상훈련 등 훈련과정, 자격증 종목, 훈련수준에 따라서 소득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별, 주택소유나 양육자녀 유무, 연령 및 학력 수준, 주거지역 그리고 종사상 지위, 사업장 규모,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서 소득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표 12> 일반계층 훈련참여자의 소득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델(5-1)			모델(5-2)			모델(5-3)		
	추정계수	표준화계수	유의수준	추정계수	표준화계수	유의수준	추정계수	표준화계수	유의수준
직무향상훈련	37.582	(0.087)	**	31.040	(0.072)	**	32.683	(0.076)	***
외국어 훈련	51.501	(0.037)	*	36.440	(0.026)	*	23.081	(0.017)	**
사업주훈련	64.608	(0.136)	***	18.515	(0.039)	#	-1.864	(-0.004)	
산업교육기관 초급	44.892	(0.045)	*	11.127	(0.011)		1.830	(0.002)	
회사부담	-62.324	(-0.106)	***	-35.500	(-0.060)	**	-27.188	(-0.046)	***
기계장비	41.020	(0.087)	**	23.879	(0.051)	**	14.108	(0.030)	#
건설	48.347	(0.057)	***	16.388	(0.019)		14.022	(0.016)	
건설	83.266	(0.090)	***	1.783	(0.002)		-4.452	(-0.005)	
전기	83.641	(0.065)	***	31.372	(0.024)	*	24.028	(0.019)	#
정보통신	67.107	(0.081)	***	30.739	(0.037)	**	17.457	(0.021)	*
성별				110.131	(0.436)	***	70.926	(0.281)	***
주택소유				15.690	(0.057)	***	12.309	(0.045)	***
양육자녀				8.977	(0.036)	*	10.302	(0.041)	**
20-29세				38.583	(0.106)	*			
30-39세				61.928	(0.237)	***	22.654	(0.087)	***
40-49세				93.120	(0.362)	***	55.719	(0.217)	***
50-59세				91.604	(0.260)	***	55.641	(0.157)	***
60세 이상				62.626	(0.062)	**			
중졸이하				-50.593	(-0.123)	***	-18.085	(-0.044)	***
전문대졸				31.884	(0.089)	***	14.451	(0.041)	***
대졸이상				76.522	(0.287)	***	52.025	(0.195)	***
군지역				-40.839	(-0.084)	**	-9.962	(-0.021)	#
주당 근로시간							0.209	(0.024)	*
정규직							119.752	(0.461)	***
비정규직							69.660	(0.242)	***
10인 미만							-15.360	(-0.059)	***
30-99인							9.902	(0.030)	*
100-299인							28.296	(0.067)	***
300-499인							46.230	(0.072)	***
500인 이상							58.935	(0.174)	***
상수	166.397		***	-0.936			-45.778		***
F	39.830***			174.680***			221.840***		
Adj R ²	0.098			0.516			0.634		

주: ***는 0.1%, **는 1%, *는 5%, #은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각각 의미.

I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직업훈련의 효과를 자격증취득가능성, 취업가능성,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구분하고 이 세 가지 효과에 미치는 훈련요인 및 사회인구학적요인 그리고 노동시장요인을 일반계층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직업훈련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증취득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훈련수료 여부와 사업주훈련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양성·전직훈련과정과 초급수준의 훈련과정은 자격증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양성·전직훈련이 지향해야 할 바를 시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훈련을 끝까지 수료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의 생활지도가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취업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훈련요인은 직무향상훈련, 훈련수료 여부, 사업주훈련, 정부지원훈련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향상훈련의 경우 취업가능성이 여타 변수 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주훈련이 이들의 직업이동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최저생계비이하의 빈곤층에 비하여 차상위계층, 일반계층의 취업가능성이 높았는데 특히 일반계층의 취업가능성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취업에 있어 소득계층간의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특히 빈곤층을 대상으로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직업훈련이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전체적으로 직업훈련이 소득의 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직업훈련요인보다는 노동시장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어떤 직장에 취업하였는가에 따라 소득의 수준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최저생계비이하 빈곤층의 경우 고급 훈련과정에 참여한 경우 소득의 크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나, 차상위계층은 훈련이 소득크기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빈곤층의 경우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차상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훈련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하나의 원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일반계층의 경우는 재직자 중심의 직무향상훈련, 회사가 훈련비용을 부담하는 훈련, 외국어훈련, 정보통신 및 전기 관련분야의 자격종목 등이 소득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업훈련요인이 소득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결과 전체적으로 직업훈련이 자격증취득과 취업 가능성, 그리고 소득의 수준을 높이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에 비하여 일반계층의 직업훈련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 소득계층별로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기초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의 훈련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기초적인 직무수행능력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양성·전직훈련의 경우 자격증 취득 중심의 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현행 초급과정 중심의 훈련은 중급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확대·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와 취업지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훈련생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훈련기간 중의 생활지도는 물론 취업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끝으로, 훈련 참여 경험이 있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경우 절반 이상이 중졸이하의 저학력 및 50대 이상의 중고령자로 기초학습능력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직업훈련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훈련보다는 일자리 마련이 우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특성을 고려한 훈련모형이 개발·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순희·노홍성(2000). 「직업훈련의 취업 및 임금효과」, 『노동경제론집』, 제23권 제2호, 127~151쪽.
- 김주섭·박진화·이지은(2006). 『탈빈곤을 위한 직업훈련 정책의 실태와 과제-자활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남재량(2004). 『고용촉진훈련의 취업기여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보건복지부(2005). 『2005년도 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오영훈(2005). 「자활직업훈련 효과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제24권 제3호, 317~341쪽.
- 이현주 외(2005).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홍근·윤여인(2005). 『직업훈련시장의 구조와 특성(Ⅲ): 직업훈련의 전달과 소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원오(1999). 「저소득계층의 직업훈련효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14권, 165~190쪽.
- 최일섭·최성재(199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 황덕순(2004). 「외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평가와 한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발전방안」,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Barnow, B. S.(1987). “The Impact of CETA Programs on Earning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XXII No.2, pp.157~193.
- Bassi, L.(1983). “The Impact of CETA On The Postprogram Earnings Of Participant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XVIII pp.539~556.
- Blalock, A. B.(1990). *Evaluating Social Programs at the State and Local Level*, Michigan: W.E. Upjohn Institute.
- Castle, N. K.(1989). *The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Policy Program Directions*, Bryn Mawr College.
- Meyer, B. D.(1990). “Unemployment Insurance and Unemployment Spells”,

Econometrica, p.58.

- Perry, C. et al.(1976). *The Impact of Government Manpower Programs*, Philadelphia: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 Vesalainen, J. & Vuori, J.(1999). "Job-seeking, Adaptation and Re-employment Experience of the Unemployed: A 3-year Follow-up",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No.9, pp.383~394.
- Veum, J. R.(1995). "Sources of Training and Their Impact On Wage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48 No.4, pp.812~826.
- Westat, Inc.(1981). *Continuous Longitudinal Manpower Survey: Net Impact Report No.1*, Report prepared for the U.S. DOL under Contract No.23-24-75-07.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Vocational Training on the Low-Income Group

Young-Hoon Oh

This study characterizes the effects of vocational education as the probability of attaining qualification certificates, employability, and income level, which are affected various factors, including training factors,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labor market factors. We make a comparison of these factors between low-income group and other income groups to generate policy implications of vocational training for the low-income group.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bability of attaining qualification certificates is positively influenced by whether people have completed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er training. In particular, employability is positively affected by skills improvement training, whether people have completed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er training. With respect to socio-demographic factors, employability is much higher among general income groups than the low-income group, especially those living under the minimum cost of living. Training factors with positive effect on income level include training in advanced levels, training for certificat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electricians; however, no such training effect is found among those living just above the poverty line. Among socio-demographic factors, gender, age, education level and belonging to general income classes exert more positive influence. Among labor market factors, full-time job, working hours and company size generate positive training effect with significance. However, in the case of the poor, the income level of the unpaid family workers is found to have negative effect with significance.

Keyword: Low-income group, Vocational training, Effect of vocational training,
Factors of vocational training